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· 생산적 금융 · 신뢰받는 금융 ·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4.10.(화) 14:30부터	배포	2018.4.10(화)
책임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 (02-2100-2860)	담당자	박 성 진 사무관 (02-2100-2863)	
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이 시 혜 (044-201-1751)		이 동 민 사무관 (044-201-1756)	
	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 시 원 (044-200-5420)		심 상 철 사무관 (044-200-5431)	
	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획부장 이 남 진 (02-2080-6600)		손 상 용 팀 장 (02-2080-6591)	

제 목 :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」 제도 개선

- 농림수산업 분야의 **혁신 창업** 및 스마트팜 등
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**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** -

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「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농신보 이용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「**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**」을 발표

- ① **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**: 창업 우대보증 개선,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
- ② **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**: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,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
- ③ **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**: 전액보증 한도 확대, 보증료율 체계 개선
- ④ **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**: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,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

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8.4.10(화) 농협중앙회에서 「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
<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>

■ **일시·장소** : 2018. 4. 10(화) 14:30 ~ 15:40, 농협중앙회

■ **참석자**

- 금융위, 농식품부, 해수부, 농신보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농촌경제연구원
- 농업인, 축산인, 어업인, 임업인 등 **농신보 이용자 5명**

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,

-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,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

①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

-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,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

②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장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,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옴

- 그러나,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·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·공·상(農·工·商)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

-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함

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

- 특히, 청장년 귀농어업인, 후계농어업경영인, 전문교육 이수자 등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

-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(smart farm)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, 곤충사육업자,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

- 더불어,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(2천→3천만원)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음

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 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

※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별첨 [별첨 1]

가. 추진배경

-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,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'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19.1% (60세 이상 농가인구: 53.1%)
- 한-미('12년), 한-EU('11년), 한-중('15년) 등 '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

- 한편, 귀농 인구 증가,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

- 귀농인구 : ('11년) 1만가구, 1.7만명 → ('16년) 1.3만가구, 2.1만명
-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·판매, 또는 체험·관광·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(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

- 그러나,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농신보”)은 1차 생산자·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·첨단화, 유통·제조·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

- '17년말 기준, 1차 생산 지원 비중 82.9%, 개인 지원비중 83.7%
- 농업법인 추이(통계청) : ('05) 2,180개 → ('10) 7,009 → ('16) 14,361
- 1) 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, 2) 곤충사육업, 실내 농작물 재배업, 농어촌 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

➡ 농림수산업 분야의 **창업 활성화** 및 융복합화·첨단화 등 **혁신**을 **효과적으로 지원**할 수 있도록 금융위, 농식품부, 해수부,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**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**

나. 개선방안

①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

- (현행)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
 -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「우대보증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(1~2억원)가 제한적*
 - * 신용심사 완화, 보증비율 상향,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, 귀농어자,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
 -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·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

⇒ (개선)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「일반적 창업보증」을 신설하고 「우대보증」의 혜택을 확대하며, 「재기지원제도」를 도입

- ① 농수산물 생산·유통·가공 관련 창업자(법인 포함) 전반에 대하여 「일반적 창업보증」 프로그램 신설(보증비율 85 → 90%)
- ② 「우대보증」의 지원대상을 확대*하고, 보증한도(1~2억원 → 3억원) 및 보증비율을 상향 (90 → 95%)
 - *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, 既 지원대상의 업력요건(3년이상) 폐지 등
- ③ 재기 가능성이 높은 「성실실패자」에 대해 채무를 감면(최대 75%)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「재기지원제도*」 마련
 - *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

②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

- (현행)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*되고, 생산방식이 자동화·지능화 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·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
 - * 실내농작물재배업, 곤충사육업,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

-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*

* 현행법상 곤충사육업, 실내 농작물 재배업, 농촌융복합산업,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

- 스마트팜·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*을 운영 중이나,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

* 예외보증: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도 (현재 스마트팜, 첨단온실,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)

⇒ (개선) 곤충사육업,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·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

- ①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*하고,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

*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「농협법」, 「수협법」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「농업·농촌 식품산업기본법」 및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으로 변경

- ②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·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 비율 상향 지원(85→90%)

③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

- (현행) 물가상승,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

- 전액보증* 한도(2천만원) 및 동일인 보증한도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)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

*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(100% 보증)하는 제도

- 개인·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

* 보증금액 1억 이하, 1~5억, 5억 초과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.3%~0.9%, 법인 0.5%~1.2%의 보증료율 적용

⇒ (개선)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,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

- ①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보증 한도를 2천만원 → 3천만원으로 상향

* 대위변제율('17년말):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.5% / 전체평균 1.6%

- ② 농어업의 규모화·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 → 15억원, 법인 15→20억원으로 확대

- ③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(개인 1,5억원 → 2,7억원, 법인 1,5억원 → 4단계 : 2,7,10억원)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*

* '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, 약 7% 수준의 보증료(약 40억원) 경감

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

- (현행)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,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*

* 인력 구성 : '17년말 356명 중 농협 303명(85%), 수협 18명(5%), 기타 35명(10%)

* 기술 심사 : 「농업기술실용화재단」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보유자를 우대 (사업성 평가에 가점 부여, 보증료율 0.2%p 인하 등)

⇒ (개선) 기금운영의 전문성·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- ① 의무근무기간(예: 5년) 도입,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(5%→10% 이상) 및 전문팀 구성·운영,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

- ② 전문직 채용 확대,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*

* 컨설팅 대상자: (현행) 보증금액 5억원 이상 → (개선) 3억원 이상

- ③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·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

*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,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(KIMST)을 추가 지정

다. 기대 효과

※ 기대효과(사례) [참고]

- 농어업 창업 활성화,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'21년부터 보증잔액이 7,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

*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(추세증가분 제외, 억원):
(18년) 1,363 (19년) 3,985 (20년) 6,526 (21년 ~) 7,682

라. 추진 계획

-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

*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

-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*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

* (법) 보증대상 확대 관련(농어업인·농수산물 범위, 농어촌융복합산업)
* (령) 동일인보증 한도 확대, 농어촌융복합산업·농수산물 상세정의
* (규칙) 구상채권 미회수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정 완화

※ [참고] 제도개선 기대효과 (사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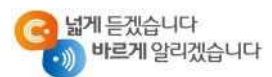
※ [별첨 1] 금융위원장 말씀자료

※ [별첨 2]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1.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

□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 사례

◆ (사례) 식품회사에서 퇴직한 △△△씨(57세)는 최근 귀농 후 농업회사법인 (업종 : 농수산물 제조·가공)을 설립하였다. 식품제조업 근무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, 자금조달이 어려워 제품 수요증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.

- △△△씨는 생산량 증대 등에 3억원이 필요했으나 현재의 신용으로는 보증 대출이 2억원까지만 가능하여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☞ 농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농어업 후계자, 귀농어자 등 개인 농어업 종사자로 한정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재 하였으나,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(보증비율 확대 : 85 → 90%)되어 △△△씨는 필요자금 3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.

□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사례 1

◆ (사례) 어선어업을 위해 귀어난 예비창업인 ○○○씨(54세)는 어업허가권이 포함된 선박매매자금 2.8억원에 대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다.

-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선박 특성상 담보가치가 높게 인정되지 않았고, 귀어 창업보증 연령제한(45세 이하) 때문에 농신보 보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☞ 창업보증의 연령기준 개선(45세→55세) 및 보증한도 상향(1억원→3억원)으로 ○○○씨는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창업자금 2.8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, 보증료율 우대(△0.2%p)로 금융비용도 경감 (매년 56만원)하게 되었다.

□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사례 2

◆ (사례) 귀촌농업인 ○○○씨(62세)는 공무원 퇴직 후 채소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면서 파종기의 잦은 고장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자, **결함을 보완·개선한 파종기를 개발하였다.** 농식품부 개최 **창업경진대회**에서 동 파종기로 입상한 이후 농가보급을 위해 창업을 결심하였지만, 자금조달을 할 수 없었다.

- ○○○씨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사업성만으로는 농신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창업의 꿈을 접어야 했다.

☞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,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**창업 콘테스트 입상자**에 대한 별도의 **우대보증 프로그램**을 신설(보증한도 최대 3억원, 보증비율 95%, 신용조사 완화)함에 따라, △△△씨도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**기능개선된 파종기 농가보급의 꿈을 실현**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 사례

◆ (사례) ◇◇◇씨(51세)는 광어 양식업에 종사하면서, 우수한 광어 양식기술과 다양한 판매망(일본 수출 등) 구축으로 성공한 어업인으로 미디어에 소개되었으나, '13년 일본 방사능 유출, 엔저 현상으로 도산하게 되었다.

- 광어 양식 노하우와 성실함을 갖춘 ◇◇◇씨는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 주위의 도움으로 **재창업**을 하고자 했으나, 도산시 상환하지 못한 구상채무(1억원), 재기 자금 부족 등으로 **또다시 좌절**하게 되었다.

☞ 농신보 OO권역보증센터는 ◇◇◇씨를 면담한 후 **경영능력, 사업성, 구상채무 상환계획, 회생가능성**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기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. **성실실패자로 인정받은 ◇◇◇씨는 구상채무 50%(5천만원)를 감면받고, 재기자금 1억원도 지원받아 재성공의 희망**을 갖게 되었다.

2.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

□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사례

◆ (사례) 귀농 후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곤충사육업자 ○○○씨는 판매처가 점차 증가하고 매출규모가 확대되자 사육시설을 확장코자 필요자금 1억원을 대출 신청했으나, 거절하여 사업확장을 포기하였다.

- 현행법상 곤충사육업자는 보증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☞ 농신보 보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곤충사육업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되어 필요자금 1억원을 보증지원 받게 된 ○○○씨는 시설 확충 후 수요에 대응가능한 생산량 증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.

□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사례

◆ (사례) ○○○씨(38세, 농업회사법인 경영)는 농업계 대학 졸업 후 비닐하우스 토마토 시설재배를 경작하던 중 네덜란드 연수에서 경험한 첨단온실 스마트팜 시설로 전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,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.

- 법인에 대한 스마트팜 예외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(50억원)가 실제 공사비(60억원)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이다.

☞ 전문교육 이수자이자 시설재배 경력자인 ○○○씨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가 70억원으로 상향(법인)되면서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. ○○○씨는 스마트팜 시설 구축으로 토마토 재배 생산량 45% 증가와 소득 20.3%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3.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

□ 전액보증 한도 확대 사례

◆ (사례) △△△씨(59세)는 영세농업인으로 밭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비닐, 모종 구입자금 5백만원이 필요하였으나,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금년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겼다.

- 담보력 부족 및 현재 농신보 전액보증 자금(2천만원)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다.

☞ 농어민의 수시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액보증한도가 상향(2천만원→3천만원)되어 △△△씨도 영농자금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영농계획을 걱정 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 사례

◆ (사례) 농업회사법인 (주)○○농산(업종 : 농산물 가공업, 보증잔액 14억원)은 최근 ◇◇병원으로부터 병원 환자식에 필요한 도라지농축액 공급계약(3년) 제의가 있었으나, 기계설비 및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.

- 동일인 보증한도(15억원) 초과로 필요자금 5억원에 대한 보증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.

☞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(개인 10→15억원, 법인 15→20억원)으로 (주)○○농산은 고도화된 보증 심사 후 추가 보증지원 5억원을 받아 최신 설비 도입 및 고정매출처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.

□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 사례

◆ (사례) □□□씨(48세, 어업인)는 멸치잡이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어선·어구 구입자금용 보증잔액 5.2억원이 있어, 매년 312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다.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생계비 고려시 312만원의 보증료는 큰 부담이 되었다.

☞ □□□씨는 이번 보증료 할증구간 조정으로 보증료 인하혜택을 보게 되었다. □□□씨의 경우 보증료율이 당초 0.6%에서 0.4%로 인하되면서 매년 104만원의 보증료가 절감되었다.

4.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

□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사례

◆ (사례) △△△씨는 수산물 원산지 구매를 통한 가공기술 특허를 취득 후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수기술 사업자로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액 2억원에 대한 보증료 경감($\Delta 0.2\%p$) 및 보증비율 우대($80\% \rightarrow 95\%$)를 받지 못하여 금융비용 추가 부담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.

-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를 위한 인증 기술평가기관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.

☞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보증지원을 위한 인증 기술평가기관에 포함되어 △△△씨는 보증비율 우대($80\% \rightarrow 95\%$)로 1.5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보증료를 할인($\Delta 0.2\%p$)으로 매년 40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.